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2013년은 '저성장'과 '신정부' 하에서 패러다임 전환 압력이 고조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삼성경제연구소는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의 키워드로 '저성장 지속', '신정부 출범', '패러다임 전환 압력'을 제시하면서 대내외적인 여건 악화로 한국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패러다임을 모색할 것이라 예상했다. 여기서는 삼성경제연구소의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 보고서를 통해 2013년 국내 경제의 화두를 되짚어 본다.



한국경제는 세계경제의 더딘 회복과 내수부진 등으로 저성장이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 부실위험까지 커지면서 어려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신정부 출범으로 시대정신이 전환되고 사회대통합을 위한 제도와 인프라 구축 노력이 활발히 전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한국기업은 체질개선을 더욱 가속화하는 가운데, 경영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2013년 국내 10대 트렌드와 키워드

키워드	10대 트렌드
경제 저성장지속	①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 지속
	② 부동산 가계부채 부실위험 고조
	③ 저금리 장기화와 금융권 경영 악화
정치 사회 신정부 출범	④ 시월대에 오른 사회대통합
	⑤ 전환을 모색하는 남북관계
	⑥ '한국형' 복지체계 모색
산업 경영 패러다임 전환압력 고조	⑦ 고효율 경영구조로 변신 가속화
	⑧ 저가경·고가치 소비 확산
	⑨ 빅데이터 활용의 확대
	⑩ 일자리 창출과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①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 지속

한국은행은 최근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2012년(2.0%)과 2013년(2.8%) 2년 연속 3%를 밑돌 것이라 전망했다. 이렇듯 국내 경제는 2013년에도 잠재성장률을 하회하는 저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한국경제의 3대 성장동력인 수출, 내수, 정부의 경기

한국경제 3대 성장동력의 약화

<p>수출(주동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기의 일상화·장기화로 세계수요 부진 ■ 원료, 신보호무역 등 수출환경 불투명 	<p>내수(보조동력)</p>	<p>정부(예비동력)</p>	<p>저성장 장기화</p> <p>저성장 시대에 대한 적응과 극복이 동시에 필요</p>
<p>내수(보조동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계부채 문제, 주택가격 하락 → 소비 부진 ■ 수출회복 지연, 건설경기 부진 → 투자 부진 			
<p>정부(예비동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장부진으로 인한 세수 부족 ■ 복지지출 증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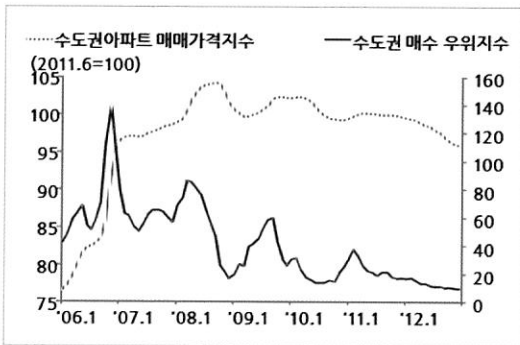
부양 여력이 모두 크게 약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저성장 국면을 조기에 극복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2013년은 저성장 시대에 대한 적응과 극복 노력이 동시에 필요한 한 해가 될 것으로 보인다.

② 부동산발 가계부채 부실위험 고조

주택가격 급락 속에 구매심리마저 얼어붙으면서 주택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다. 즉 2012년 12월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고점 대비 20% 내외로 급락한 가운데 주택가격 추가 하락 가능성에 대한 기대로 주택구매 수요도 급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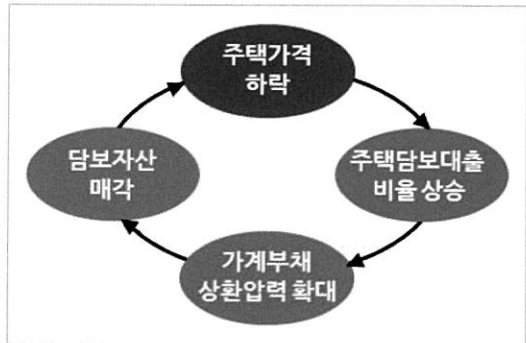
부동산경기 침체와 경기둔화로 2013년에는 가계부채 부실위험이 고조될 우려가 크다. 주택경기 침체로 과다차입에 의존한 주택구매자의 채무상환 부담이 커지고, 경기둔화로 저소득층과 자영업자 등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특히 금융위기 등 외부충격이 발생할 경우 가계의 자산-부채 디플레이션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주택가격 및 주택구매태도 추이



자료: 국민은행, 전국 주택가격동향조사

자산-부채 디플레이션 발생 경로



이러한 가운데 경기변동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가계 재무 건전성 악화가 우려되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금리수준이 높은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크게 확대되고 있다. 또한 경기 둔화로 저소득층의 소득여건과 자영업자의 경영환경이 악화되면서 취약계층의 재무건전성이 더욱 나빠질 것으로 보인다.

가계부채 증가는 지속적으로 한국 경제성장의 잠재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이에 정부는 가계부채 만기도래시 장기분할상환방식 전환 유도, 취약계층에 대한 전환대출 공급 확대 등을 대응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 부실 위험 상승



③ 저금리 장기화와 금융권 경영 악화

글로벌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주요국 기준금리가 사상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제로금리, 유로존 0.75%, 영국 0.5% 등 현재 주요국은 사상 최저수준의 기준금리를 지속 중이며, 한국도 기준금리가 2011년 1월 이후 최저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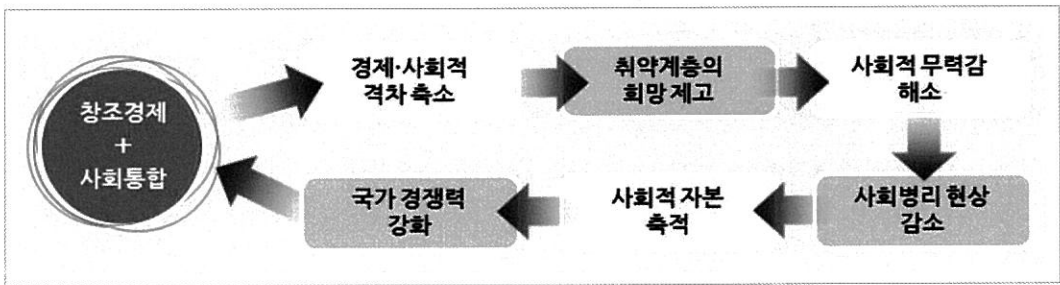
각국이 경기침체에 대응해 저금리정책을 펴자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금융권의 경영악화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에 금융사들은 저금리 장기화에 대비하여 대출관리 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수익구조 다변화와 해외진출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④ 시험대에 오른 사회대통합

2012년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전통적인 갈등전선인 지역·이념 이외에도 계층·세대간 갈등이 증폭되고 구조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정치·사회적 갈등이 공동체의 분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장하는 통합형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이렇듯 깊어진 사회균열을 극복할 수 있는 통합형 리더십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신정부는 성장과 통합의 조화를 추구하는 ‘창조적 공존’ 정책을 추진할 전망이다. 즉 정부는 사회대통합을 체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사회갈등 치유의 효능을 높이는 제도적 인프라를 확충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발전과 사회대통합의 선순환 고리



⑤ 전환을 모색하는 남북관계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즉 한국과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가 유연해지면서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가 대화와 협상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3차 핵실험 이후 핵문제가 부상하면서 새로운 위협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핵문제에서는 비핵화와 대북보상의 연계방식, 대북 사찰방식 등이 난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핵문제에서 북한이 먼저 성의를 보이지 않는 한 도발이나 유화 제스처에 일희일비하지 않겠다는 밝히고 있어 공방이 예상되고 있다.

⑥ 한국형 복지체계 모색

복지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커지는 가운데 신정부는 한국 실정에 맞는 복지체계에 대한 논의를 보다 구체

회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복지에 대한 국민의 높은 기대와 신정부의 정책기조로 인해 복지제도 확대가 신 정부 첫해의 화두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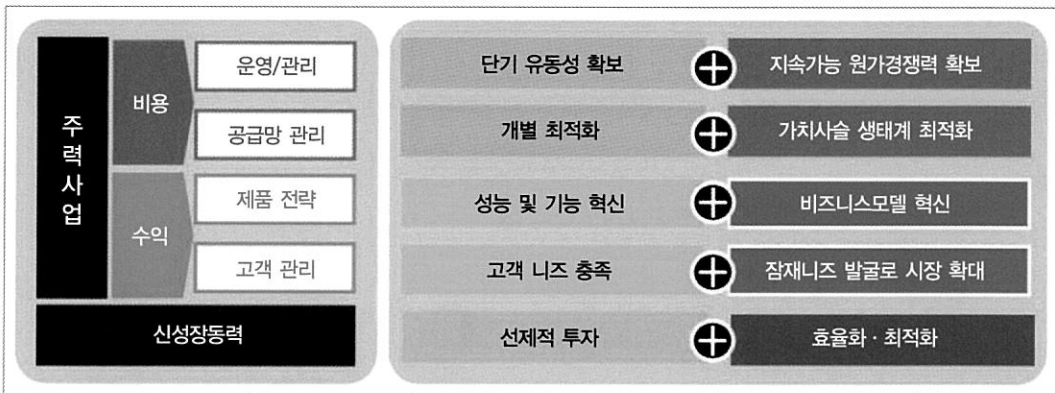
이에 보편적·선별적 복지의 이분법적인 틀을 탈피하여, 상호 조화를 추구하는 한국형 복지체계를 구축하려는 제반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자립을 추구하는 고용친화적 복지체계를 정립하고 복지행정 체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데 중점을 둘 것으로 보인다. 즉 재화와 서비스의 재분배를 통한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증대시켜 자립을 도모하는 자립형 복지제도를 추구하는 한편 현재 13개 부처에서 진행되고 있는 292개의 복지프로그램을 총괄하는 기구를 신설하여 복지제도 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도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⑦ 고효율 경영구조로 변신 가속화

2013년에는 고효율 경영구조로의 변신이 가속화될 것이다. 이는 환율변동, 가격경쟁 심화 등 복합 악재 속에서도 지속성장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구조의 체질화’가 급선무이기 때문이다.

원고·엔저, 주력시장 저성장 심화 등에 직면한 한국기업은 비용우위와 수익창출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 비즈니스모델을 혁신하고, 가치사슬 통합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각 기업들은 신성장동력사업의 추진성과를 점검하고 효율화와 최적화를 위해 사업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성장 장기화에 따른 기업 대응전략의 고도화



⑧ 저가격·고가치 소비 확산

불황 장기화로 알뜰형 소비패턴이 정착되는 가운데 저 가격·고가치 소비가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다양한 할인정책과 모바일 쇼핑 소비자를 겨냥해 편의성을 극대화한 불황형 마케팅이 보다 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소비자는 불황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히 값싼 상품에 만족하지 않으며, 할인시기를 기다리는 등 구매 타이밍을 조절해 가격과 품질을 동시에 추구하는 소비행태를 보일 것이다.

⑨ 빅데이터 활용의 확대

정보통신기술(ICT) 코리아의 위상을 이어가기 위한 새로운 기대주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ICT 업계의 새로운 돌파구로, 빅데이터 기반의 서비스와 업무혁신 프로젝트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2013년에는 민간-공공의 빅데이터 생태계 윤곽이 보다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공공빅데이터 플랫폼을 마련하고 이를 이용해 혁신 프로젝트들을 진행함에 따라 관련 중소 민간기업에 성장동력이 공급될 것으로 보인다.



⑩ 일자리 창출과 정년연장 논의 본격화

2013년에는 일자리 창출과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될 것이다. 일자리 창출과 유지를 위한 정부와 정치권의 정책개발 및 추진이 가시화될 것이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인력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인사제도의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즉 현재 체류연한과 연공적 처우에 기반한 인사제도에서 역할과 직책 중심의 직급 및 승급체계가 검토되기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에는 법 시행에 맞춘 단계적 정년연장 조치와 50대 이상의 경우 임금피크제 등 생산성에 걸맞은 임금체계 도입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조직 내에 신규세대가 공존하면서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는 세대간 공감대 형성 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